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압도적 부결에 관심

여론전 나선 국힘·민주 날선 공방
비명계 이탈표 여부도 주목
동의안 부결 후 여론 향배 촉각
당 지지율 하락땐 사퇴 압박 일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투표동의안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대장동 사건의 핵심에 검사 집단, 50억 클럽이 있음에도 이 대표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류 소설보다 못한 사건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탈 표 규모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민주당 의석수(167석)를 감안하면 부결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분위기도 부결로 결집하는 흐름이다. 문제는 이탈 표의 규모다.

이탈 표가 5표 이내라면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탈표가 많아야 2~3표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 표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161표)때 보다 많은 6표 이상이 되면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해도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에 나선다면 민주당이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이다. 당장, 이 대표는 다음달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이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와 관련,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체포동의안 정국'이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친명과 비명 간의 내홍은 물론 친명 내부의 단일대오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국민의힘에 밀리는 민주당 지지율도 이 대표의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당내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마련해야 할 당내 경선 룰 정비와 당원평가가 포함되는 당무감사도 화약고다. 민주당 정당 혁신위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기존의 하위 20%에, 20%의 감점을 주는 규정을 10%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경선 다자구도시 결선투표제 도입, 하위 30% 의원 명단 공개 문제 등도 폭발성이 크다. 또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무감사에 당원평가를 도입하는 문제도 비명계 의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특히, 친명계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 출구 전략과 관련, 공천 개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내 혁신을 고리로 이 대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정면돌파론이다. 하지만, 이는 비명계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도 최근 비명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 무리한 전략공천이나 혁신 공천보다는 기존의 시스템 공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 등 이 대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시 이탈표 규모 및 민주당 지지율의 향배 등은 이 대표의 정치적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이 이재명 구속 찬성 아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근거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일부 정의당원들이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며 반발하자 당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문자 메시지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일관되게 주장한 방침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주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선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운 최고조…3월 임시국회 여야 대치 예고

3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27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또 여야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에 대해 거야(巨野)의 '실력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 24일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 몫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 부결 여파까지 겹쳐 여의도 정가가 더욱 얼어붙었다.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3월 국회에서도 여야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3월 국회를 '이재명 방탄 국회'로 규정하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겨 쥐었다.

3월 임시회가 공휴일인 3·1절에 개회하게 된 것 역시 회기 중 불체포를 노린 '방탄'이라며 연일 비난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대선 공약을 부각하며 국민과 약속을 어기지 말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이 대표를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알리는 카드뉴스 제작도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 및 정적 제거'인 만큼, 체포동의안의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따라서 부결 이후 대여 공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쌍끌이 특검에 대해 3월 국회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김·부·장 비리'를 대여 공세 여론전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기현 땅 투기 의혹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민주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의 울산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특별검사)을 시행해 지역토착·토건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 등 당내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법조 카르텔과 지역토착·토건 세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 투기 의혹은 2007년 울산KTX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김 후보 소유 임야를 지나도록 휘었고, 이 과정에서 그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진상조사단은 회견에서 "김 후보는 1996년부터 1998년 8월까지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로,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땅을 사들이는 과정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1997년 신경주역사가 확정되자 울산역 유치운동이 벌어지고, 그 1년 뒤 김 후보는 KTX 노선 인근 구수리 땅을 산다"며 "'땅을 사고 5년 뒤 KTX 울산역 논의가 있었으니 해당 토지 구매는 이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야로 돼 있는 땅을 IMF 당시 어려워진 교회 교우로부터 샀다'는 김 후보의 해명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교회 지인) A씨가 (1998년) 1월 31일에 토지주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2월 10일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하루 만인 11일에 김 후보에게 판다"며 "부도 위기에 몰린 이가 왜 땅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이튿날 땅을 파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동산 매매와 경매를 업으로 하는 이로, 김기현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운영하던 경매전담팀 일원이었다'는 풍문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